



조간 제 8048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음력 2월 2일)

고유가 충격에 외식물가도 '들썩'...소비자는 '한숨'

삼겹살·냉면·자장면 등 서민 음식 일제히 올라 '가성비' 패스트푸드도 인상...쌀값 상승 주요인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치찌개·삼겹살 등 서민 먹거리 가격마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쌀값도 7개월째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최대 26%까지 급등하는 등 밥상물가와 외식 물가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참가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삼겹살(200g) 가격은 1만6111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월 1만5911원 대비 1.3%(200원) 오른 수준이다.

주요 외식 메뉴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냉면은 1만300원으로 전년(9900원)보다 400원 뛰었고, 자장면은 6900원에서 7400원으로 500원 올랐다. 서민 음식 김치찌개 백반도 8200원에서 8500원으로 상승했다. 또 삼계탕은 전년 1만64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800원, 비빔밥은 지난달 1만6000원으로 100원 인상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삼겹살(200g) 가격은 지난달 1만8975원으로 지난해 1만8333원에 비해 3.5%(642원) 올랐다.

냉면은 9222원에서 9556원(334원)으로, 김치찌개 백반은 7778원에서 7944원(166원), 자장면은 7056원으로 전년 6778원에서 278원 상승했다. 삼계탕은 1만5889원에서 1만6330원



(441원), 비빔밥은 9056원에서 9111원(55원) 뛰었다.

이같은 외식비 상승 요인으로는 계속되는 고물가 기초 속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이 꼽힌다.

여기에 최근 빛어진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와 곡물·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상승은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과 가공식품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성비'를 내세웠던 패스트푸드마저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KFC는 지난 13일부터 총 23종 메뉴 가격 200~300원가량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최대 400원 인상했고, 버거킹도 와퍼 등 제품 가격을 100~200원 인상했다.

쌀값이 수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가며 물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기준 쌀 10kg 평균 소매 가격은 3만6214원으로 지난해 보다 23.1% 올랐으며 평년보다는 25.8% 상승했다. 20kg 기준 소매가격은 6만2951원으로 13.7% 올랐다. 평년보다 16.5% 상승한 수준이다.

쌀 산지가격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20% 정도 폭등했다. 18일 기준 쌀 산지가격은 20kg당 5만7716원으로 지난해보다 19.7% 높으며 평년 대비 19.4% 상승했다. 쌀 가격은 지난해 9월 6만원선을 뚫은 이후 7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올해 6만30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제감물가 안정을 목표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을 운영하며 지난 달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가격 상승 요인과 유통 비효율,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는 제과·양산빵·빙과류 5개 업체가 4월 출고분부터 22개 품목의 100~400원까지 최대 13.4% 가격을 낮춘다고 밝혔다. 원재료인 밀가루·설탕 가격 인하 요인 및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농심·오뚜기·삼양식품·팔도 등 4곳이 일부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4.6~14.6% 인하한 바 있다. [요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mailto:yo1404@gwangnam.co.kr)



활짝 핀 노란 산수유꽃 아래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인 19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산수유꽃 아래서 봄기운을 만끽하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영원불멸의 사랑'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는 산수유 꽃은 노란색으로 3~4월에 앞보다 먼저 피는데, 그 모양이 아름다워서 관상수로 많이 재배된다. 열매는 타원형으로 붉게 익어서 말리면 작은 대추처럼 보이며, 한방에서 약재로 이용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mailto:bluesky@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 6·3지선 예비후보 분석해보니

여성 참여 저조... '청년정치인' 품귀 심각

여성비율 24.2% 그쳐...50세 이상 '4명 중 3명' 민주당 359명...진보 40명·혁신 32명·국힘 3명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첫해가 되는 올해 지방선거에 여성 예비후보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대 이상 중장년층 예비후보자가 4명 중 3명 정도에 이르는 등 청년 예비후보를 찾기 힘들 정도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 관련기사 2·8·9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전남광주특별시 예비후보자는 광역의원 140명, 기초의원 264명, 교육감이 6명 등 45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여성은 모두 111명으로 24.2%에 달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에 목표하는 여성공천 비중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도 선관위에 등록된 여성 예비후보자는 22.6%에 불과해 선진국 수준

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는 달리 성별 불균형이 해소될 여지가 희박해 보인다.

여성 예비후보자 비율은 광역시와 광역도 사이에도 큰 차를 드러냈다.

광주의 경우 여성 예비후보자가 광역의원 32.7% (52명 중 17명), 기초의원 40.7% (108명 중 44명)에 달했다.

반면 전남은 여성 예비후보자가 광역의원 11.4% (88명 중 10명), 기초의원 22.4% (156명 중 35명)에 각각 그쳤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하고 도시화가 진행된 광역시의 경우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은 반면, 농촌이 많고 인구가 분산된 광역도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 향후 정당별로 공천을 거쳐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자 성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출발선인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는 여성 후보가 많지 않으면 당선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후보 또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년 전인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주전남지역 당선인(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은 모두 381명이었고, 이 가운데 여성 당선인은 66명으로 17.3%였다.

올해 예비후보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청년보다는 중장년 예비후보자가 두드러지게 많다.

전남광주특별시 예비후보자들 가운데 50세 미만은 108명에 그친 반면, 50세 이상은 350명(76.4%)에 달했다.

이는 초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mailto: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mailto:gnnews1@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다 www.gwangnam.co.kr 계속

여야 6개 정당, 개헌 동의...5·18, 부마항쟁 등 담기로

내달 7일 헌법 개정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 민주당·조국혁신당

·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6개 정당은 헌법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더해 부마 민주항쟁도 포함하는데 동의하고, 다음달 7일 헌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오는 30일 2차 회의 전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mailto:solee235@gwangnam.co.kr)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광주광역시교육청